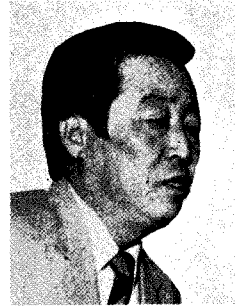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의 입장



구 본 영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한 나라의 농업정책이란, 그 나라의 농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말하며, 농업의 채산성이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60년대 중반이후 공업화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채산성은 무시하고 농축산물의 증산에만 주력한 결과, 농민은 공업화를 위한(도시민을 위한) 저농축산물 가격정책에 의하여 희생되고 도·농간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채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농사의 결과는 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연속이어서 채산성이 있는 업종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어(소·돼지파동, 마늘·양파·고추파동 등) 도산하고 이농하는 농민이 얼마나 많았던가?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 아니라 「천하지투기본」이 되어 있으니 농산물의 국내 가격안정 없이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국내 농축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밀·목화 등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밀·목화농사는 폐농되었고,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밀·목화밭을 구경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되었다.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어 수수·옥수수·참깨 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밀·목화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며, 또한 축산물도 그러할 것이다.

농축산물의 개방에 앞서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을 몇가지 기술해 보면,

1. 국가는 농축산물의 수입에 앞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놓고 수입을 하여야 할 것이니, 첫째로 농축산물의 원자재에 대하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둘째로 농축산물의 수출에 대하여 공산품과 동일한 지원책을 써야 할 것이며,

2.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이므로 수입으로 인한 이윤은 당연히 농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진대 지금까지는 농축산물의 수입업자만 폭리를 취하였으니 이를 시정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은 농민조합만이 하여야 할 것이며,

3. 농축산물의 수입은 국내가격의 안정을 이룩해놓은 다음에 하여야 하며, 국내 수요량의 70~80%는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수입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4. 우리나라 공업화의 원동력은 농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정부는 공산품 수출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여 세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농축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며,

5. 농민단체들은 단결하여 수입농축산물 안먹기 운동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며,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최소화시켜 우리의 생업을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